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유예기간 만료로 9월부터 미가입자 대상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9651개소 중 94.12%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의무 위

분이며 시·군별로는 군산시(154개소), 전주시(146개소), 완주군(94개소), 부안군(44개소) 순으로 미가입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7~8월 동안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1방문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 집중홍보 등의 가입률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미가입시설의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만12세까지 확대 실시

생후6개월~59개월 이하 → 생후6개월~만12세까지 확대
어르신은 종전과 같이 만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 지원

전북도는 생후 6개월~만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경우 9월11일, 어르신의 경우 10월2일부터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가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만 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학생의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

로 보인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은 예방접종 실시기준(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또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사업기간에 맞춰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

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확대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아 무료접종을 통해서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라 및 질병부담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1339, ☎129)로 문의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 등에서 확인(9월 11일~)할 수 있다.

/김진성기자

문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분명히... 불안감 해소 적극 검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종합... 노후소득 강화 목표로"
"국민연금 개혁, 국민동의 전제로 추진... 긴 관점으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 두발언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

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에 10년 이상 걸린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지연되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北과 일정 협의중"

靑, 폼페이오 방북 취소... "영향없다 할 수 없어"
통일부 "이달 목표로 준비해와... 일정 협의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訪北)을 취소한 가운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이번 주 내 가능하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며 "며칠 후엔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10일이 지났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지연 상황과의 개연성에 대해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개소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 남북 정상회담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소 일정과 관련해 재검토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해 왔고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는 연락사무소 관련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사실상 타결이 됐고, 합의서 서명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며 "개소 일정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이견으로

개소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이 일정을 합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개소 일정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개소식과 관련해 이번 주 중·후반에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개소식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정권 수립기념일인 9·9절과 관련해 집중하고 있어 개소식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연락사무소 초대 소장직에 대한 남북 간 입장도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백 대변인은 "(북측에서도) 상부의 위임 받아 협의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 연락사무소 소장에는 정무직 차관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대통령 "태풍 피해 수습·복구 만전... 재난대비 매뉴얼 재검토"

"맞벌이 부모 가정 아이 돌봄 대책 강구해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전남 지역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대비 매뉴얼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 두발언에서 "8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은 전국적 규모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며 "상륙 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

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비를 잘하고, 특히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이라고 발언을 열었다. 이어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가동,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의 진행 상황 및 정부 대처 상황을

실시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일부 지역에선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또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다.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함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런 점에 허점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